

# 수난 3대...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인가

## 에스프레소



조귀동

경제 칼럼니스트

아직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규모 집회 소식을 전하는 날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곤 한다. 괜히 집회에 나가진 않았는지, 무슨 탈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걱정해서다. 민주화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집회·시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과거 겪었던 극단적인 정치 폭력 때문이다. 1951년 가을 화순 백야산 일대에 파리를 틀고 인군을 습격하던 빨치산에게 잡혀간 조부는 시신을 찾던 며칠 동안 기절조차 모른다. 부모가 십수 일간 공포에 떨어야 했던 1980년 5월 광주를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말부터 안부 전화 여자가 심상치 않아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폭력이 용인되는 수준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를 멸절시킬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대집단 없이 나오게 됐다.

정치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우리 편'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지 표적이 될 수 있다. 같은 진영이라도 비

주류는 언제나 청산 대상이다.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데다, 이교도에겐 관대할 수 있지만 이단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정치 종교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차라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신을 찍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곤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흥행했던 좌표 찍기와 각종 집단 린치가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걸 대비해서다.

허위 사실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잦다. 이름에 '귀'가 들어간다고 중국인이라며 조리돌림당하는 이들을

**조부는 빨치산 납치, 부모는 5·18...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청산'?**  
극단적 진영 정치 갈수록 심각  
중도 배제한 정치, 미래 있겠나

보면 공포심이 든다. 호남 출신에다 발음도 좋지 않으니 어느 우파 유튜버가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피할 방도가 없다. 여권 정치인 한 명이 고향이 담양이라는 가짜 뉴스와 함께 그래서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라고 공격받았던 걸 보면서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치인의 고향으로 지목된 마을은 내 조부가 잡혀갔던 곳이다. 산골에 약간의 논밭이 있는 집안의 차남으로 중졸 학력인 그도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당시 전남에서는 좌우의 간에 살육전이 강도 높게 벌어졌다. 신문, 토지

소유, 종교의 차이는 물론 씨족과 마을 간 갈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던 상황에서, 좌우 양쪽 모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극단적 폭력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극단적 진영 정치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정치색이 없고 특정 진영에 충성하지 않는 이들이다. 언제든 비(非)국민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변과 생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고집해서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을 억제하건대 오히려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이유도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강경파에 편승하는 행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력이 일상화된 정치는 폐허만 남긴다. 누구든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 위험을 입는다. 오늘은 승자가 된 것 같아 보이는 세력도 내일이나 모래집먼 패잔병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배제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공동체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6·25전쟁 이후 전남의 지식인과 엘리트는 위축됐고 서양화 등 서울과 맞설 만한 성과를 보였던 지역 문화는 흔적도 남지 않았다. 어쩌다 정치 폭력이 그대로 노출된 '수난 삼대'가 되고 싶지 않은 건 단순히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중도를 배제하는 정치의 결과가 뻔해서다.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3]

### 설사병을 퇴치한 남자의 초상화

이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20세기 초 인류를 설사병에서 구원한 피에르 부카르 박사다. 유산균을 쟁쟁히 쟁쟁히 연구한 그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찾아보시라. 1907년 부카르 박사가 인본(人叢)에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분리해,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는 정장제 '락테올'을 만들었다.

그런데 혐미경을 손에 쥔 실험실의 부카르는 설사병 퇴치 중인 세균학자가 아니라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하는 필름 누아르의 주인공처럼 매력적이다. 흰 실험복이 트렌치코트보다 멋스럽고, 손에 쥔 시험관이 마치 와인잔처럼 보이는 건 순전히 화가 타마라 드 렘피카(Tamara de Lempicka·1898~1980)의 놀라운 능력 덕분이다.

폴란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렘피카는 변호사와 결혼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주하다 러시아 혁명을 피해 유럽에 정착한 뒤로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체주의를 익혀 대범하게 형태를 단순화하고 공간을 왜곡하면서 고전주의적인 회화의 세밀한 묘사와 매끄러운 표현

효과를 결합해 인물의 특성을 잘 살려낸 장식적인 초상화를 그려냈다. 상류층의 화려한 삶에 익숙했던 그녀는 두 번의 세계 대전 혼란 속에서도 부유층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들과 자유로운 연애를 병행했다.

말년을 멕시코에서 보낸 렘피카의 유골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멕시코의 활화산 포포카테페틀에 뿌려졌다. 최근 경매에 나온 '부카르 박사의 초상'은 우리 돈 125억원에 팔렸다. 이제 부카르 박사는 락테올보다 렘피카가 그린 초상화의 남자로 더 유명하다. 그녀의 영혼은 지금도 활화산처럼 쉬지 않고 타올라 뜨겁게 분출하는 모양이다.



타마라 드 렘피카, 부카르 박사의 초상, 1928년, 캔버스에 유채, 137×78cm, 개인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社 說

### 尹 대통령, 李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며 대립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게 되면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쟁적으로 집결하고, 그만큼 충돌 위험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낮추기는커녕 반대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 파면 촉구를 요구하는 도보 행진을 했다. 민주당은 현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도보 행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했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동도 있는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현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승복 입장을 밝힌 국힘 지도부와 달

리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은 현재 앞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했다.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승복 요구가 통할 리 없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국민 저항권" "제2의 5·18" 같은 발언으로 불복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침묵하며 지중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방송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육성이나 서면을 통한 승복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여부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쟁기에 여념이 없다.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연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평(端平·가만히 누워 있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했다. 보태고 뺄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교수들은 또 "의료 기사 댓글 등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 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잘못

한 것이 맞지만 극단적 대립은 나라를 파괴한다. 그런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나머지 문제들도 협상으로 풀어나갈 여건이 돼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복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배기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으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료와 교육을 정상화하고 남은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길에 들어서야 할 때가 됐다.

### 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국회 논의 제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현안의 선점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65세에서, 정년을 더 늘려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켜야 노인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60세의 건강을 과거의 60세와 비교할 수 없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국회 특위를 만드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정년 연장 방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감소 없이 정년 65세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 연장이나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일 본식 모델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 방식이다. 기업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청년 취업을 악화시킬 것이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렸을 때, 청년 고용이 17% 격감한 바 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더 늘리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풀리고, 그 피해는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겐 돌아간다.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임금 체계 개혁, 고용 유연성 제고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해 정년 연장도 연계한 종합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서울대생들의 언론 비판

# 탄핵 선동 완장 찬 좌파보다 기회주의 언론이 더 날뛰었다

- 주동자 노릇 두 번이나 ... 이게 언론?
- '식인귀' → '황제 폐하 만세'
- 이런 프랑스 신문의 최후는?
- 4.19 후 서울신문의 운명은?



▲ 서울대 학부학생들의 기자회견. © 이종현기자

### ◆ 언론의 (압살함)

3월 14일 서울대학교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국회의 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는 질타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議題)를 던졌다. 언론 현실에 대한 준엄한 논고였다. 그들은 "언론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라 비판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 ※ "SBS 스포츠뉴스는 여론조사를 하다가, **《탄핵반대》 비율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덮어버렸다.**"
- ※ "어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호칭을 쓰지 않다가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슬쩍 **갔다 불렀다.**"
- ※ "언론은 학생들의 부정선거 거론을 불문곡직 **《극우 음모론》**으로 몰아쳤다."
- ※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국민이 편파 보도-가짜뉴스에 **함몰되지 않게 《개혁》**해야 한다."

1815년 3월 9일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자, 일간지 **《르 모니외르》**는 그를 **《식인귀》**라 불렀다. 호칭이 하루하

루 달라졌다. (→괴물→폭군→참탈자→보나파르트)로, 그가 파리 퐁텐블로 궁에 입성했을 땐 **《황제 나폴레옹》**이라 불렀다. 이 **《압살함》**을 오늘의 한국 언론이 그대로 닮았다면?

### ◆ 언론, 이제 외면당할 것

언론이 대학생들의 비판을 우습게 봤다면 큰 실책(失策)이 될 것이다. (4.19)를 잊었는가?

학생들의 **《국민저항권》**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경북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발동했다. 언론들은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다. 두 달 뒤 **《고대생 4.18 시위》**가 터졌다. 이 행렬을 자유당 정권이 폭행했다.

이튿날 4.19 날엔 서울 시내 전 대학생들이 총으로, 시청 광장으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진군했다. 경찰이 실탄을 쏘다.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였다.

### ◆ 왜 《극좌 탄핵 공작》에 연거푸 가담?

그때의 언론의 자유 저항 정신은 어디로 갔나? 오늘의 언론은 **《극좌 탄핵 공작》**에 영합, 선두에 섰다. 자유 진영 두

대통령을 연거푸 몰아냈다. **《가짜 뉴스와 여론몰이》**로

이게 옳았나? 대학생들은 "노(no)"라 선언했다.

이런데도 언론이 4.19 당시의 **《미운 자》**들 처처럼, 프랑스의 **《르 모니외르》**처럼 처신한다면? 답은 언론이 더 잘 알 것이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이란 말을 썼다. 타율적 변화를 뜻했다. **《타율적》** 변화는 반드시 최선만은 아니다. 그에 앞선 **《자율적 발전》**이 더 좋은 길이다.

2025년의 대학생들은 왜 언론을 **《비판의 표적》**으로 쳤을까? 그들은 왜 언론을 **《공감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을까? 언론은 이점을 뼈아프게 자문(自問)해야 할 것이다. 1960년 4.19 당시와 너무 다른 언론 현실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3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